



수백억 애물단지 공중전화, 대책 없는 정부

공중전화 운영 손실에 따른 통신사 분담 금액 5년간 총 1,700억원
손실누적→관리부실→이용률저해 악순환에도 정부는 나몰라라

- 최근 이동전화 보급 확대에 따라 이용률이 급감한 공중전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, 지난 5년간 공중전화 운영손실에 따른 국내 통신사들의 분담 금액은 총 1,700억원으로, 이는 금년 8월 시행된 이통사 가입비 40% 인하 효과(미래부 추산, 연간 2천억원)에 육박하는 금액이다.

< 최근 5년간 통신사업자의 공중전화 손실 부담액 >

해당연도	'07	'08	'09	'10	'11	합계
공중전화 손실부담총액	517억	430억	356억	227억	171억	1,701억

* 출처 : 미래창조과학부 (2013)

- 공중전화는 90년대 후반 무선호출서비스(일명 ‘삐삐’)의 급격한 확대로 전국에 15만대 이상 설치되는 등 최고 전성기를 누렸지만, 이동전화 보급이 확대되고 인터넷 채팅 등 통신 대체 수단이 등장하면서 최근 들어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.

- 또한, 이용률 급감에 따른 손실 누적은 공중전화의 관리 부실로 이어졌고, 고장파손 상태로 방치된 공중전화가 늘어나면서 공중전화 이용률을 더욱 감소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.
-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매년 공중전화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미봉책으로만 일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민의원의 주장이다.
- 민병주 의원은 “공중전화 운영손실에 따른 적자를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있고, 이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, 정부는 공중전화 적정설치대수 및 설치기준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, 불필요한 적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” 고 말했다.
- 또한, “공중전화 적정설치대수 기준 산정 시 지역별 휴대폰 보급률을 감안하여 규모를 보다 현실화 하고, 저소득층 거주 비율, 노인인구 거주 비율 등을 고려한 지역별 필요 공중전화 대수 차등 적용과 같은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” 고 강조했다.
- 민 의원은 또 “Wi-Fi 중계 활용, 무인 택배 출납소·민원 발급기·ATM 등의 편의시설 설치, 무인 관광안내소 활용 등 공중전화 부스의 다양한 활용방안과 서울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‘디지털 뷰’ 설비, 미국·중국의 Wi-Fi 공유기 설치 사례, 오스트리아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활용 사례 등 공중전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국내외 다양한 활용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” 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. <끝>